

# 하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 남 시  
【사회복지과】

## 하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 1. 제안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관련사항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부조합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장사행정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법령에 맞는 용어 정의 수정(안 제2조)
- 나.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수정(안 제6조)
- 다. 분묘의 설치기간 변경(안 제8조)
- 라. 상위법령 관련조항 변경(안 제5조1항·제6조·제7조·제17조·제18조1항)

###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7조의4·제77조의14·제80조의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제115조의3·제115조의4

##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7. 입법예고 결과

가. 입법예고 기간 : 2016년 10월 28일 ~ 11월 14일(18일간)

나. 의견내용 : 의견없음

## 8. 부서협의 결과

가. 성별영향분석 평가 : 의견없음

나. 규제개혁관련 협의 : 해당없음

##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 10. 관련부서 : 경기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하남시 조례 제 호

## 하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를 “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과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설장사시설”이란 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4. “공설묘지”란 시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5. “공동묘지”란 장사시설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6. “공설봉안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봉안당, 화장한 유골을 뿌리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시설 등을 말한다.
7. “관내”란 시 지역을 말한다.

8. “관외”란 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9. “공공요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이라 함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공동요지를 수려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중 “관내에”를 “시에”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관할구역안의”을 “관할구역 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봉안·자연장 유도

제4조제4호 중 “재개발·공원화의”를 “재개발과 공원화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시장은 법 제5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종합계획과 도의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지역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

제2장의 제목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을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로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별표1과 영 제15조 별표2 및 영 제18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봉안시설(공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조례가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가족 봉안시설은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2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중중 또는 문중 봉안시설,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묘,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는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시계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경우 및 도 조례 제6조 제2호에 따라 공설·공동묘지를 공설봉안시설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 제4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산사태·침수 등으로 재해가 발생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제8조 (분묘 설치기간) ①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명칭·소재지등은”을 “명칭·소재지 등은”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사용허가등)”을 “(사용허가 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내에”를 “시에”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사용료 및 관리비등)” 을 “(사용료 및 관리비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료등” 을 “사용료 등”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사용료등” 을 각각 “사용료 등” 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 3. 무연고 행여사망자
- 4.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중 “관리등” 을 “관리 등” 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 (묘지의 사전매매 등) 영 제25조제5호에 따라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매매 등을 허용하는 요건은 공설·공동묘지 내 12위 이상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묘(분묘형태에 한함)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 (사용 허가권 등의 승계) ①공설·공동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신고권(이하 “허가권 등“이라 한다)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허가권 등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공동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의 사용허가나 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다만, 상속과 제18조에 따라 승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
- 3. 시장이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사용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경우
- 5. 기타 법령 및 조례를 위반 하였을 경우

②사용허가나 신고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중 “시설내의 기물등을 손괴하거나” 를 “시설 내의 기물 등을 파손 또는” 으로 한다.

제21조를 제22조로 하고,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 (권한위임) 시장은 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사회복지과
입 안 자	부서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최정호
	팀장 직위.성명	노인복지팀장 박상향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안미영 (790-626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하남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u>	<u>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u>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률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하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 이라 함은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평장“이라 함은 시체 및 유골을 지하에 매장한 후 봉분을 만들지 아니하고 상석·비석등이지상에 돌출되지 아니하게 분묘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설묘지“라 함은 시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4. “공동묘지“라 함은 장사시설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5.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이라 함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공동묘지를 수려하고 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장사시설“ 이라 함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법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과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설장사시설“이란 시가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4. “공설묘지“란 시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5. “공동묘지“란 장사시설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6. “공설봉안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봉안당,

경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p>화장한 유골을 뿌리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시설 등을 말한다.</p> <p>7. “관내“란 시 지역을 말한다.</p> <p>8. “관외“란 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p> <p>9. “공공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이라 함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공동묘지를 수려하고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p>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u>관내</u> 에 설치·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 <u>시에</u> -----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p>1. <u>관할구역안의</u>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p> <p>2. <u>화장·납골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u> 및 <u>관련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u></p> <p>3. <u>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의 유도</u></p> <p>4. 선진·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u>재개발·공원화</u>의 추진</p> <p>5. (생략)</p>	제4조 (시장의 책무) ----- <p>1. <u>관할구역 내의</u>-----</p> <p>2. <u>화장·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u> 및 <u>관련 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u></p> <p>3. <u>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봉안·자연장 유도</u></p> <p>4. ----- <u>재개발과 공원화의</u> --</p> <p>5. (현행과 같음)</p>
제5조 (묘지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별 제5조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시장은 별 제5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종합계획과 도의 수급계획에 맞

<p>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관할구역안의 묘지등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p>	<p>추어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지역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 삭제</p>
제2장 <u>묘지·화장장·납골시설</u>	제2장 <u>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u>
제6조 (납골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7조의2 별표1 및 영 제13조제1항 별표3에서 공설 또는 개인·가족 및 중중(문중)납골시설(공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의 납골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장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 인근주민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별표1과 영 제15조 별표2 및 영 제18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봉안시설(공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조례가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p>1. 개인·가족 봉안시설은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2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p> <p>2. 중중 또는 문중 봉안시설,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묘,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는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미터,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p>

	<p>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시계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경우 및 도 조례 제6조 제2호에 따라 공설·공용도지를 공설 보안시설로 재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제7조 (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 법 제15조 및 영제14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붕괴·침수등으로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 제4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산사태·침수 등으로 재해가 발생한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해심사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5년이내에 산사태·침수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강구되지아니한 지역	
제8조 (분묘설치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15년씩 3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기간은 분묘의 설치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8조 (분묘 설치기간) ①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할 때에는 중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소재지등은 별표1과 같다.	제10조 (명칭 및 위치) ----- --- 명칭·소재지 등은 -----.
제11조 (사용허가등) (생략)	제11조 (사용허가 등) (현행과 같음)
제12조 (사용자의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	제12조 (사용자의 범위) ① -----

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두고 3월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시에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 (사용료 및 관리비등) 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 (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 “사용료 등”----- -----.
② 관내 공공묘지의 재개발에 따라 조성되는 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도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 ----- ----- 사용료 등을 ----- -----.
③ 시장은 사용료등을 사용허가와 동시에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을 ----- -----.
제14조 (사용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료등을 감면할수 있다.	제14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
3. 무연고 행여사망자	3. 무연고 행여사망자
4. 사용료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민간자본의 유치) ① (생략)	제15조 (민간자본의 유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공	②----- ----- -----

사 시행 및 준공후의 <u>관리등</u> 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u>관리 등</u> ----- -----.
제16조 (위탁운영) ① (생략)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 (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라</u> ----- -----.
<u>제17조 (묘지의 사전매매등) 영 제16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매매등을 허용하는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u> 1. <u>시장이 판내 공설묘지의 수요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u> 2. <u>공설묘지내 12위 이상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묘(분묘형태에 한함)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u>	<u>제17조 (묘지의 사전매매 등) 영 제25조제5호에 따라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매매 등을 허용하는 요건은 공설·공동묘지 내 12위 이상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묘(분묘형태에 한함)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u>
<u>제18조 (사용 허가권등의 승계) ① 공설묘지 및 공설납골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신고권(이하 “허가권등”이라 한다)은 사망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u> <u>② 허가권등을 승계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제18조 (사용 허가권 등의 승계) ①공설·공동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신고권(이하 “허가권 등”이라 한다)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u> <u>② 허가권 등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제19조 (사용허가등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 묘지 및 공설납골시설의 사용허가나 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u> 1. <u>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다만, 상속과 제17조 규정에따라 사전매매를</u>	<u>제19조 (사용허가 등의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공동묘지 및 공설봉안시설의 사용허가나 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u> 1. <u>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다만, 상속과</u>

<u>허가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u> <u>3. 시장이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4. 사용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u> <u>5. 기타 법령 및 조례 또는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u> <u>② 사용허가나 신고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u>제18조에 따라 승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2.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u> <u>3. 시장이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u>4. 사용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경우</u> <u>5. 기타 법령 및 조례를 위반 하였을 경우</u> <u>② 사용허가나 신고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제20조 (원상복구 및 변상) 장사시설의 사용자·수탁자 및 이용하는 자가 <u>시설내의 기물등을 손괴하거나</u>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원상복구 및 변상) ----- ----- <u>시설 내의 기물 등을 파손 또는</u> ----- -----.
<신 설>	<u>제21조 (권한위임) 시장은 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u>
<u>제21조 (생략)</u>	<u>제22조 (현행 제21조와 같음)</u>



# 《 관계법령 발췌서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5.12.29.>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 <2015.1.28.>
11. 삭제 <2015.1.28.>
12. 삭제 <2015.1.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 가. 배우자
- 나. 자녀
- 다. 부모
-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 바. 형제·자매
-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아. 가족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7.30., 2015.6.22.>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6. 피해자와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상담원 등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7.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체계 구축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다. <개정 2015.1.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보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종·문중의 보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수급(需給)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2016.1.28.>

1. 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사시설의 수요 변동 추세와 공급 전망
3. 장사시설의 확충계획 및 재정투자계획
4.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5.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6. 그 밖에 장사정책 및 장사시설 수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이하 "지역수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2016.1.28.>

③ 시·도시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수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지역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0.>

1. 지역수급계획의 기본방향
2. 관할 구역의 연도별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 및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매장자 수, 화장자 수, 봉안자 수 및 자연장자 수와 그 변동 추세에 관한 사항
4.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존의 장사시설 등의 정비계획 또는 확충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에 따른 분묘의 일제 조사와 법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지역 간 장사시설의 수급 조정, 장사시설의 공동 설치 및 장사시설에 관한

갈등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수립 지침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⑤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구역별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7.20.>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 협의 사항을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5.>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된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받은 지역수급계획의 연도별 추진 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36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5.7.20.>

⑩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지역수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2015.7.20.>

제11조(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과 수목장립 등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조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8.29.>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법 제17조제1호에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인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조성하는 10제곱미터 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를 말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
3.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자

③ 법 제17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2.10.29.>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8.9.22., 2010.3.9., 2012.7.20., 2013.6.17., 2014.7.14., 2015.7.20., 2016.1.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

나.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같은 조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조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법인묘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봉안탑·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목장림을 설치·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일 것

1)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10만제곱미터

2)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

6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다만, 자연장지는 요존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8.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9.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방지(砂防地)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 법 제17조제1호에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중증·문증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조성하는 10제곱미터 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를 말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

3.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家業)을 승계한 자

③ 법 제17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2.10.29.>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8.9.22., 2010.3.9., 2012.7.20., 2013.6.17., 2014.7.14., 2015.7.20., 2016.1.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

나.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지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같은 조 제2호의 상업지역 중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및 같은 조 제3호의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법인묘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봉안탑·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목장림을 설치·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일 것

1)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10만제곱미터

2)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되어 있을 것

6의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 다만, 자연장지는 요존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8.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9.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방지(砂防地)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